

제229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 1563호
----------	---------

2019.10.4.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9. 9. 19.
- 나. 회부일자 : 2019. 9. 23.
- 다. 상정일자 : 2019. 10. 2.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 최한철 기획경제국장

나.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 (제명,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정비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 외교부,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

- 행정관리국 → 행정국, 자치행정과 → 도시안전과,
청소년팀 → 아동친화청소년팀

3) 일본식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 등 용어 정비

- 계리 → 회계처리, 지참 → 지각, 장애자 → 장애인,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자 → 사람

- 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에 따른 과태료 준용 법령 규정 정비
○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6) 개별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제명 등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정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기영)

- 의안번호 제15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19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9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 일괄개정조례안은 ①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은 경우나 ②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따라 관계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형태이며,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제명,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2019.8.6.부터 8.26.까지 21일간 개정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58건(조례 35건, 규칙 18건, 훈령 5건)의 개정내용이 발굴되었음. 이 중 우리 의회의 검토대상은 조례 35건임.

▶ 일괄개정 세부유형별 건수

구분	합계	정부조직법	용어정비	주민등록번호	과태료준용	상위법령	보궐임기
총계	65	17	10	12	4	21	1
조례	36(중복1)	7	5	4	3	16	1
규칙	24	8	5	6	1	4	0
훈령	5	2	0	2	0	1	0

※ 중복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조례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과태료준용 2가지에 해당

▶ 국(소)별 건수

국(소)	합계	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전수	58	3	16	15	14	3	4	3

○ 주요 내용은

가. 「정부조직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서)명 현행화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총 7건이며,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5개 조례와, 광진구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2개에 대한 일괄정비로 입법의 신속·편의성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일본식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총 5건으로,

- “지참” 을 “지각” 으로, “계리” 를 “회계처리” 로,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바꾸는 등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통한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사용으로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안으로 판단됨.
- 한자어 정비와 더불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는 2017. 3. 23. 서울시설공단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라는 명칭이 “서울시설공단” 으로 현행화 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소규모공사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적용제외 되던 규정을 기존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에서 ‘제6조(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으로 한정하여 위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4조(적용의 예외)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u>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u>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6조 <u>내지 제8조</u>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적용의 예외) ----- ----- <u>서울시설공단</u> ----- <u>및</u> <u>제7조</u> ----- -----.

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이며,
- 「개인정보보호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과태료 규정 정비 : “지방세 징수의 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위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총 3건이며, 개별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하는 등 과태료 집행절차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¹⁾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법에 따라야 하는 바, 법령체계에 따르는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마. 개별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 정비

- 위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총 16건으로 상위법의 제명 또는 근거 조항이 변경된 경우가 이번 개정 사례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의 경우 근거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2011년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면개정되어 관련 조항이 변경된 것을 현재에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수시로 통보되는 법령개정사항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반영하여야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위원회 위원의 보궐임기 개정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u>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4조 (위원의 임기)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고만 규정할 뿐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상위 법령에서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궐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²⁾
- 일반적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라고 하더라도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아닌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7, 376쪽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209쪽 참고)
- 본 조례안 외에도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이 광범위

2)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p.106

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각 조례마다 임기를 통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오랜기간동안 수정·보완하지 않은 자치법규와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가 시급한 개별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시급하고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이 관련 조례에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안정적인 법체계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